

이재용, 항소심 집행유예로 석방

재산국외도피·영재센터 후원금·재단출연금 모두 무죄... 승마지원 등 일부 유죄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 17일 구속영장 발부 이후 353일만에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 공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최지성(67)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64)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방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56) 전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구속상태에 있었던 이 부회장 뿐만 아니라 최 전실장과 장 전사장도 조만간 석방될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에 대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으며 실제 가담 정도나 범행 전방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의 후계자이자 삼성전자 부회장, 등기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결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방에 미친 영향이 크다"면서도 "다만 대통령령의 승마지원 요구를 일사기 거절하거나 무시한 것,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아무런 범죄



농민 집회로 경찰들 교통정리 분주

5일 오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이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농민 입장을 반영한 헌법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자 경찰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핵심사형인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담보

로한 공여가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1심이 인정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인정된 것이 꼽혔다.

또한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

넘긴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마필 구매 대금 등을 제외한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 뇌물로 인정됐다.

판결 후 특검팀에서 상고할 의지를 내비쳐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설공단, 시민참여 사업설명회 개최

전주시설공단은 9일까지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각 사업별로 사업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시민참여 사업설명회는 새 정부의 열린혁신, 참여·소통을 배후로 2018년 공단의 경영전략과 중점사업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시민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특히 시민들의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 반영, 개선함으로써 고객중심의 만족도를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

전주시설공단 전성환 이사장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 개선해 시민 삶의 질과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자전거도로·이용시설 안전점검

전주시가 파손된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시는 5일부터 14일까지 반복되는 동계과 용해로 인해 파손된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보관대 이상 유무를 점검, 도로변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는 등 자전거 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은 설을 앞두고 시민들과 귀성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총 81개 노선, 409km의 자전거도로 위 적치물과 불법 입간판 등 각종 자전거

통행 장애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자전거도로의 포장면 파손 여부, 각종 안전표지판 파손 여부를 조사, 자전거 보관대 206개소의 파손 및 청소 상태, 방치 자전거 유무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호범 자전거정책과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정비로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며 "설 연휴기간동안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장애인 성폭행 임신중절 60대 항소심서 징역 9년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60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중간간)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경 20대 지적장애인 B씨를 자신의 차에서 성폭행을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부모도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임신한 B씨는 유도분만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까지 했다.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은 있지만, 당시 B씨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점을 이용,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수차례 간음하고 이 사실을 말하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는 등 그 죄질과 범행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임신한 피해자는 임신중절을 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합의를 중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 월 13만원 지급’

전주시, '2018 달라지는 시장' 6개 분야 42개 시책 정보 담은 책자 발간·배포

전주시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소개한 '2018 달라지는 시장,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 각 주민센터 등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일반행정 등 물론 세제, 보건·복지, 산업·경제, 건설·교통·환경, 문화·관광 등 6개 분야 42개 항목에 대해 정리돼 있다.

민원·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민원 24', '대한민국정부포털', '알러드림' 등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각종 행정서비스를 '정부 24'로 통합했다. 앞으로는 정부 24를 통해 모든 민원업무와 정책·정보 등을 24시간 365일 온라인에서 열람·신청·발급 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의 서명이 아닌 전자서

명 방식을 도입해 편의성을 높였다.

세제분야 분야의 경우 세무조사 시종전 보다 5일을 연장해 15일 전까지 사전통지하고 과세예고 통지 접수가 아닌 일부에 대해 조기 부과결정, 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납세자의 세무조사 준비 과정 부담을 완화했다.

부동산 업무에서도 단속 공무원에서 제한적인 조사·단속이 아니라 위험행위에 대한 증거확보는 물론 범행동기, 고의성 위반 등 폭넓은 조사와 단속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올해 4월부터 청년희망기움통장을 도입해 생계급여수급 청년(15~24세)의 매월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원을 더 공제·저축하고 정부가 추가로 근로소득 장려금(월 평균 30만원, 3년 평균 1440

만원)을 지급한다.

또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기존 생후 6개월~59개월에서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로 확대된다. 나아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산업·경제 분야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주(과세소득 5억원 미만 등의 요건 충족 시)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협동조합 설립 변경·분할 및 합병·해산, 조직변경 신고 등의 접수·처리를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과)에서 가능하고 공공부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인 생활임금을 지난 해보다 13.5%(1280원) 오른 시간당 8,810원을 지급하게 된다.

건설·교통·환경 분야의 경우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250만원을 지원,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차량에서 LPG 차량으로 단계적 전환하며 전환 시 구매보조금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1인당 연간 6만원 지원하던 문화누리카드를 7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책자에 담았다.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이 책자에는 전주시와 정부의 변화된 제도, 정책을 담고 있어 시민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기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채규남 기자

잠겨지지 않은 차량만 노린 40대 절도범 구속

잠겨지지 않은 차량만 노려 절도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5일 절도 혐의로 A(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5시58분께 익산시 여양동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A(여,58)의 차량에서 가방을 훔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

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과 가족이 없는 조씨는 잠겨지지 않은 차량만 노려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과 일정한 주거가 없는 점을 감안해 그를 구속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민께 묻습니다

이 곳은 대체 어디일까요?



1. 전주시민 누구나 5분 거리에 갈 수 있는 곳
2. 쉽고 편리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곳
3. 짜릿함과 즐거움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곳
4. 마음을 힐링해 주는 곳
5. 영원한 안식을 제공해 주는 곳



한 걸음 더, 시민 속으로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완산수영장 자전거경륜장 월드컵경기장 월드컵골프장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덕진수영장 승마장 인라인롤러경기장 게이트볼장
론볼장 덕진체력공원 아중체력공원 완산생활체육공원 덕진공원 솔내체육공원 고덕축구장 교통약자지킴이 전주승화원 봉안당(원) 효자공원·공동묘지 효자자연장